

 **대구광역시의회 보도자료**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

제 공 일 자	2022. 11. 24. (목)	
제 공 부 서	정책분석담당관실	
정책분석담당관	장찬호	803-5110
담 당 자	임창효	803-5111

## 이만규 의장, 저출산 해소를 위한 난임부부지원 확대 대정부 건의

- 11월 24일(목),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의'에서 제안
-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에 소득과 횡수를 따지지 않는 무차별적 지원 강조

대구광역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11월 24일(목) 경남 진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2년 제6차 임시회'에 제출한 '저출산 해소를 위한 불임 및 난임부부 지원 확대 건의안'이 원안 통과됐다.

- 이만규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2021년 합계출산율이 0.808로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출산기피국가로 이대로라면 2100년경에는 현재 인구의 절반수준인 2천678만 명으로 줄어들고 GDP 순위는 세계 10위에서 2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등 국가경쟁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정부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저출산 해소를 위해 무려 271조 원 이상으로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 정부의 저출산해소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으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책 및 지원금 규모가 통일되지 않아 전국적인 정책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최근 들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출산 지원정책보다는 출산을 바라는 이들의 적극적인 출산을 돕는 확장적이고 체계화된 핀셋 지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이만규 의장은 이번 건의안을 제출하였다.
- 이만규 의장은 이번 건의안에서 “중앙정부가 출산지원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지원신청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난임부부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으므로 난임 시술에 대한 횟수 및 소득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난임치료를 위한 각종 시술과 검사 등 더 많은 부분에서 의료급여화가 이루어져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난임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 한편, 이번 건의안은 원안대로 협의회 의결을 통과하였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보건복지부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붙임 : 저출산 해소를 위한 불임 및 난임부부 지원 확대 건의문(안)

## 【붙임】

# 저출산 해소를 위한 불임 및 난임부부 지원 확대 건의문(안)

지난 2021년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합계출산율 0.808로 떨어졌다. 그러나 불과 6개월이 지난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로 불과 반년 만에 0.7대로 추락하고 있다.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출산 기피 국가가 되어버린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0점대로 연구에 따르면 2100년경에는 인구가 절반 수준인 2천678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GDP 순위는 세계 10위에서 2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등 국가경쟁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저출산 해소에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저출산 해소를 위해 무려 271조 이상(21년 기준 국회예산정책처)을 투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출산율은 하락을 거듭하고 있으니 이제는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출산 지원정책보다는 출산을 바라는 이들의 적극적인 출산을 돕는 확장적이고 체계화된 핀셋 지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들어, 불임 치료 시술비를 지원받을 때 연령과 횟수에 따른 제한을 없애자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지원신청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한정된 소득 기준은 여전히 그대로 두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중위소득 이하가 되려면 소득이 없는 여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시술비를 줄 테니 직장을 포기하란 말이나 다름없다. 사회의 목소리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자 하는데 실상은 제도적으로 경력단절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 해소정책이면 오로지 저출산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구태여 소득 기준을 두어 난임부부의 출산 의욕을 떨어뜨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횡수 제한뿐만 아니라 소득제한도 없애야 한다.

또한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과 검사 등의 더 많은 부문에서 의료급여화가 필요하다. 특히 난임 치료를 위한 PGS(착상 전 유전진단검사)는 배아의 기형 등을 사전에 확인해 착상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기형아 출산과 유산의 위험성 줄여주기 때문에 난임부부에게는 중요한 검사이다.

그렇지만 검사비 부담이 커 이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착상 실패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PGS 검사나 착상 유지 주사와 같은 난임 치료에 필요한 검사 등의 경우 의료급여 항목으로 추가해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에도 이바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난임 부부에 대한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소득에 따른 차별 없는 지원과 의료보험 비급여 항목인 난임 관련 각종 검사 등의 급여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난임부부 지원은 저출산 해소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지 저소득자를 위한 복지 지원정책이 아니다. 따라서 소득을 가지고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저출산 해소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해가 될 뿐이다. 정부는 난임부부의 난임 치료에 대해 소득, 연령, 횡수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난임부부는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인공수정 외에도 PGS 검사 등 착상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추가검사비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어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난임 시술을 위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 정부는 난임 치료 비급여 항목을 조정해 PGS 검사와 같은 중요한 검사는 의료급여로 전환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22년 11월 일

**대한민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 회장 김현기**

부산광역시회의회의장	안성민	대구광역시회의회의장	이만규
인천광역시회의회의장	허식	광주광역시회의회의장	정무창
대전광역시회의회의장	이상래	울산광역시회의회의장	김기환
세종특별자치시회의회의장	상병헌	경기도회의회의장	염종현
강원도회의회의장	권혁열	충청북도회의회의장	황영호
충청남도회의회의장	조길연	전라북도회의회의장	국주영은
전라남도회의회의장	서동욱	경상북도회의회의장	배한철
경상남도회의회의장	김진부	제주특별자치도회의회의장	김경학